천년의 빛 영광 HOTEL THE STAR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TEL. 061) 350-7900

전남매일

www.jndn.com
2021년 9월 3일 금요일
제8704호 (음력 7월 27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062)720-1000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현대아미스(주)
공동주택관리 경비·청소 용역 소방시설관리
소독·저수조청소 전기안전관리 대행

광주지역 병원 4곳 파업…진료 차질

전남대·조선대 1,100명 참여
신규 입원 안되고 수술실 멈춰
인력 확충·임금 가산 등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예고된 총파업을 전격 철회한 가운데 광주지역 병원 4곳에서는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했다.

이들 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협상 타결에도 병원별로 이뤄진 협상에서 인력 확충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며 파업에 나섰다.

특히 이번 파업에 참여한 의료 인력만 해도 1,600여 명에 육박한 만큼 우려되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 등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지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다.

전체 직원 4,000여명 중 노조 조합원은 2,300여 명으로 이 중 3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필수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노조는 이날 병원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대강당에서 교육 등을 진행했다. 기존 인력조차 유지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환자가 줄어든 병동의 근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 인력을 줄이거나, 퇴사·육아휴직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하지 않았다"며 "병원 내 필수 근무 인원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휴가 확충, 공휴일 및 주말 임금 50% 가산, 하위 직군 급여 산정 기준 현실화 등도 요구했다.

조선대병원 노조도 교섭이 결렬되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부족 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며 이날 오전 7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조선대병원 직원 1,500여 명 중 조합원은 1,100여 명으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조선대병원 노조는 "환자이송원, 업무보조원, 조리사 및 조리원, 장례지도사, 세탁운반원 등을 1년 10개월만 고용하고 새로 뽑는 행태를 개선해달라고 병원 경영진 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간호사 등급제도 상향 조정해 간호사 1인이 맡는 환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대병원의 경우 파업에 동참한 다른 병원에 비해 파업규모가 크다 보니 의료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외래 진료의 경우 예약 건수를 제외하고는 환자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인력 부족이 심한 일부 진료과목은 예약 환자마저 소화하지 못해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실에서는 신규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 입원 환자 중 증세가 가벼운 환자들을 퇴원 조치했으며, 수술실도 가동이 거의 중단돼 당장 급한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사전 안내를 통해 일정을 연기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파업이 시작된 만큼 병원 경영진과 노조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당장 오후 늦게라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파업이 하루라도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도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노조원 48명 전원이 파업에 참여해 이날 오후 인력 확충, 근로여건 개선, 위험수당 지급 등을 병원 측과 논의했지만 재차 결렬됐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은 노조원 138명 중 육아휴직자를 제외하고 125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한시라도 눈을 떼기 어려운 재활환자 돌봄에 따른 살인적인 스케줄로 고통을 호소하며 인력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노정교섭 타결로 산별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아직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이 남아 있다"며 "9월7일까지 1주일간을 현장교섭을 완전 타결하기 위한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제13차 노정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처우 개선 방안 등에 합의했다.

/오선우 기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와 조선대병원지부는 2일 인력난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 조선대병원노조가 파업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주의 중심도시 자긍심을 높이겠다"

대선 예비후보에 듣는다

〈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예비후보는 "광주·전남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드론 및 우주개발, 전기자동차 등 3대 미래형 산업 기지를 육성 하고 천혜의 섬 군락을 '세계적인 친환경 섬 휴양벨트'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추 후보는 2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4.0시대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미래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성과가 바로 헌법재판소"라며 "현대사에서 광주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도시 된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광주에 유치해 행정중심도시 세종에 이어 헌법중심도시, 민주주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광주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촛불개혁에 함께 했던 제1 야당 대표로서 촛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선진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며 "21세기형 선진강국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은 첨단 미래산업 전초기지 만들 것"

양극화 불공정을 치유하며 국민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 후보는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를 통해 제대로 분권과 견제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검찰개혁이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이재명 "과반 득표" vs 이낙연 "역전 가능"

민주당 대선주자 충청권 사수 사활

경선 판세 풍향계 정치권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대전·충남 권리당원 온라인투표를 시작으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첫 승부처인 충청권 민심 향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과반득표로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여론조사와 바닥민심은 다르다며 역전을 노리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 역시 가장 공을 들인 충청권에서 만큼은 자존심 회복을 장담하고 있다. 이밖에 3명의 군소 후보들 역시 이곳에서 반전을 통해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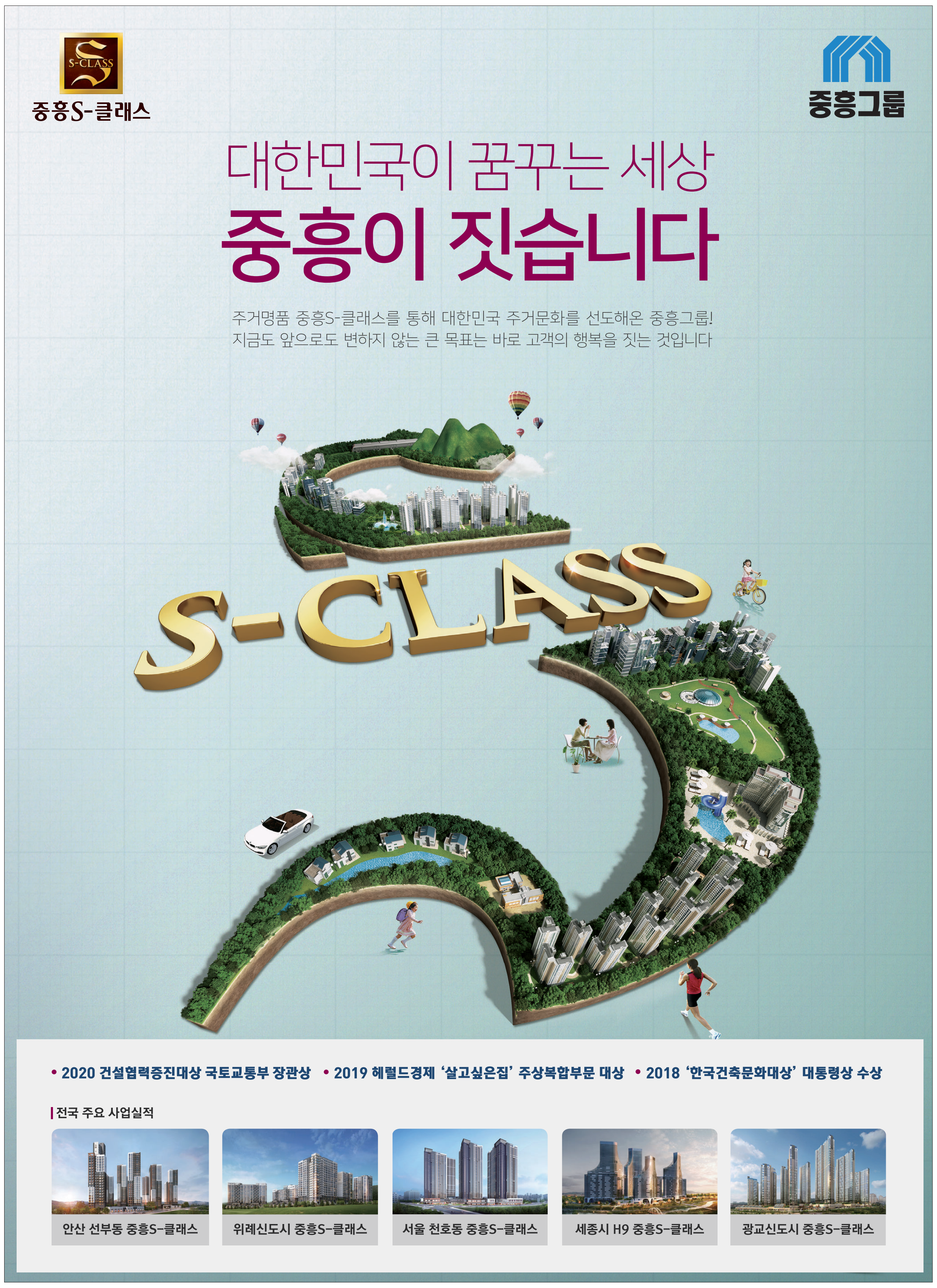
충청권은 주요 선거 때마다 영호남 지역 대결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더구나 이번 경선에선 연고를 주장할 충청 출신 후보도 없어 4일(대전·충남)과 5일(세종·충북) 공개될 투표 결과는 경선 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의원 1,500여명과 권리당원 8만여명이 참여하는 충청권 경선은 전체 경선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충청권의 경선 결과가 오는 다음달 1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까지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각 후보들은 충청권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순회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여론조사와는 확연히 다른 후보 및 캠프의 조직력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회경선은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어느 캠프에서 더 많이 모았는지 여부가 승부처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여론조사 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각 후보와 캠프 주요 관계자들은 현장 당원들을 만나 '한표'를 호소하는 동시에 온라인 권리당원 표심을 잡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중전'도 적극 활용 중이다.

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충청권이 첫 경선지인 만큼 결과에 대한 상징성이 매우 크다"면서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여론조사와 같은 격차를 유지하며 선두를 유지할지 여부와 이낙연 전 대표의 선전으로 격차를 근소하게 줄이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focus
시, 위기계층에 351억 지원 ▶2면
주목받는 전남도의회 조례 ▶4면
학동 참사 피해보상 "글쎄요" ▶6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18면